



WP 22-06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변화 실태와 유출인구 특성 분석

최예술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부연구위원 (yschoi@krihs.re.kr)



※ 이 Working Paper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저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연구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은 저자의 이메일로 문의하여 주시고, 인용 시에는 저자 및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차례

01 서론	05
02 인구감소지역 인구변화 실태 분석	09
03 인구감소지역 유출인구 특성 분석	19
04 종합 및 시사점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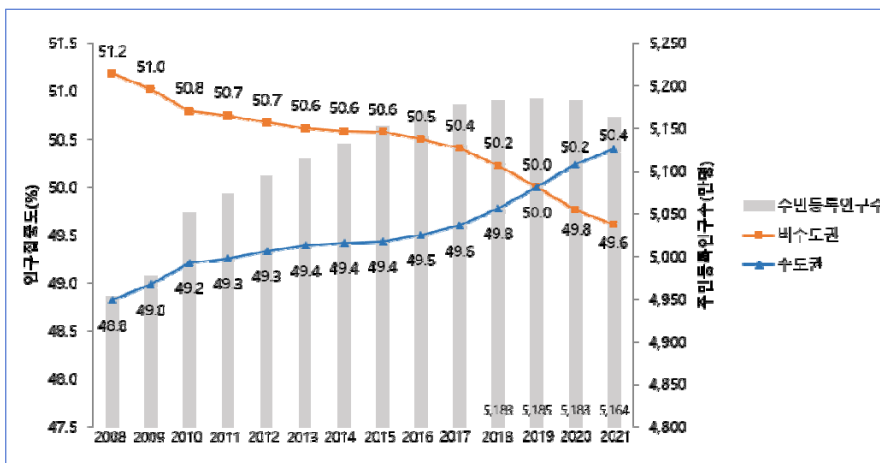
0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019년 말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50.1%)가 비수도권 인구를 역전했고, 비수도권 20~30대 청년층의 유출 심화로 인해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인구 격차와 지역 불평등 이슈가 대두됨

- 주민등록인구 수는 2019년 인구정점을 기록한 후 2020년에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으나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국토연구원 2021)
 - 수도권 인구집중도 : 42.8%(1990년) → 46.3%(2000년) → 49.3%(2010년) → 50.1%(2020년)
- 2020년 주민등록인구의 사상 첫 감소는 낮은 출산율, 높은 고령화율로 인해 2020년에 최초로 사망자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dead-cross)를 경험한 것에 기인하며, 국토 공간 내 수도권 인구집중 및 지방의 인구감소는 출생, 사망 등 자연적 증감보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에 따른 사회적 증감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통계청 2021)
 - 합계출산율 : 2.06명(1983년 인구대체수준) → 1.48명(2000년) → 1.24명(2017년) → 0.84명(2020년)
 - 고령인구비율 : 5.3%(1992년) → 7.0%(2000년) → 10.9%(2010년) → 16.4%(2020년)

그림 1 주민등록인구 수, 수도권 및 비수도권 인구집중도 추이(2008~2021)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https://jumin.mois.go.kr/>, 2022년 5월 10일 검색)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지역 간 인구규모 불평등의 심화로 비수도권은 소멸 위기를 겪고 있음. 지방이 소멸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 지방소멸이 최근 국내 최대 정책 이슈로 꼽히고 있다는 것은 지방으로 대표되는 비수도권에 이미 인구감소에 대한 위기의식이 만연함을 시사
- 지역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2021년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지정·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 89개의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했으며 이들 지역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임
 - 2021년 6월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제2조의3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등)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같은 해 10월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이 우려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함 - (지정기준)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8개 지표로 구성된 인구감소지수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정(행정안전부 2021)
 - 재정분권 2단계의 일환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여 2022년부터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향후 10년간(2022~2031년) 매년 1조 원씩 지원 예정(행정안전부 2022)
-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5년 주기로 지정하되 이번이 최초 지정임을 고려하여 향후 2년 동안 인구감소지역의 실태를 분석하여 지정을 보완할 계획(행정안전부 2021)이므로, 현시점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변화 실태, 인구이동 요인, 그리고 유출인구의 특성 분석에 기초한 실증적 논의 필요

2) 연구의 목적

- 89개 인구감소지역¹⁾을 대상으로 인구변화 실태, 인구이동 요인, 유출인구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인구변화 실태는 인구증감률, 인구증감요인(자연적·사회적 증감), 인구유출 현황(연령대별 순이동률, 주요 전입지) 등을 살펴보고, 인구이동 요인 및 유출인구 특성은 연령, 교육 수준, 직업 등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주목하여 분석함

1) 이 페이퍼에서 언급되는 ‘인구감소지역’은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고시한 89개 기초 지자체를 의미함.

3) 연구의 범위 및 분석자료

- 이 페이퍼의 공간적 범위는 89개 기초 지자체로 구성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함
 - 89개 기초 지자체는 대체로 도 지역 내 시·군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수도권 내에서 인구감소가 비교적 심각하게 진행되는 인천(2개), 경기(2개) 일부 지역과 도심 공동화로 인구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광역시 내 일부 자치구(부산 3개, 대구 2개)도 포함됨
- 분석자료로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청의 「국내인구이동통계」,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함
 - 인구변화 실태 분석을 위한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청의 「국내인구이동통계」 등을 활용하였고, 인구이동 요인 및 유출인구의 특성 분석을 위한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함
 - 5년 단위로 제공되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원시자료(Microdata)는 「한국노동패널자료」에 비해 충분한 표본 수를 제공하고 있으나, 2015년 자료가 현시점에서의 최신 자료이며 5년 전 자료로는 개인의 거주지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어 부득이 이동 전 시점과 현재 시점의 개인 특성이 동일함을 가정해야 하는 한계가 있음

그림 2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부산(3개)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2개)	남구, 서구	
인천(2개)	강화군, 옹진군	
경기(2개)	가평군, 연천군	
강원(12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과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북(6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충남(9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북(10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장흥군, 함평군,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진도군, 해남군, 화순군	
	군위군,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북(16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출처: 행정안전부 2021; 파이낸셜뉴스 2021.

02 인구감소지역 인구변화 실태 분석

- 이 장에서는 인구증감률, 인구구조 변화, 인구증감요인, 인구유출 현황 등을 분석하여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변화 실태를 파악하고자 함
- **[인구증감률]** 2000~2020년과 2010~2020년 기간 동안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증감률은 각각 -22.4%, -9.2%로 나타났으며, 비인구감소지역은 각각 13.4%, 3.8%로 나타남
 -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 간 인구증감률 격차가 상당하며 이 추세가 지속될 시 향후 인구감소지역-비인구감소지역 간 인구규모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
 - 89개 인구감소지역 내 인구증감률 격차 또한 상당했는데, 인구증감률이 높은 지자체는 대체로 수도권 또는 수도권과 가까운 강원, 충북 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관찰됨
 - 2000~2020년 기간 동안 인구가 증가한 지자체는 총 4곳(경기 용진군(46.0%), 경기 가평군(11.2%), 인천 강화군(3.1%), 강원 횡성군(1.11%))으로 나타났으며, 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한 지자체는 대구 서구(-40.3%), 부산 영도구(-38.6%), 전남 고흥군(-36.7%) 순으로 나타남
- **[인구저점연도 및 인구정점연도²⁾]** 2000년 이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 동안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정점연도는 대체로 2000년 또는 2000년 이전(73%)에, 인구저점연도는 2020년(84%)에 집중되어 있어 이들 지역의 인구 저점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음을 시사
 - 인구정점연도가 2020년인 지역은 인천 강화군(인구저점연도 2003년), 인구저점연도가 2000년인 지역은 인천 용진군(인구정점연도 2017년)이 유일함

표 1 인구정점연도 및 인구저점연도 분포(2000~2020년)

연도	인구정점연도	인구저점연도
2000년 또는 2000년 이전	65개(73%)	1개(1%)
2001~2004년	16개(18%)	2개(2%)
2005~2009년	-	6개(7%)
2010~2014년	2개(2%)	-
2015~2019년	5개(6%)	5개(6%)
2020년	1개(1%)	75개(84%)
합계	89개(100%)	89개(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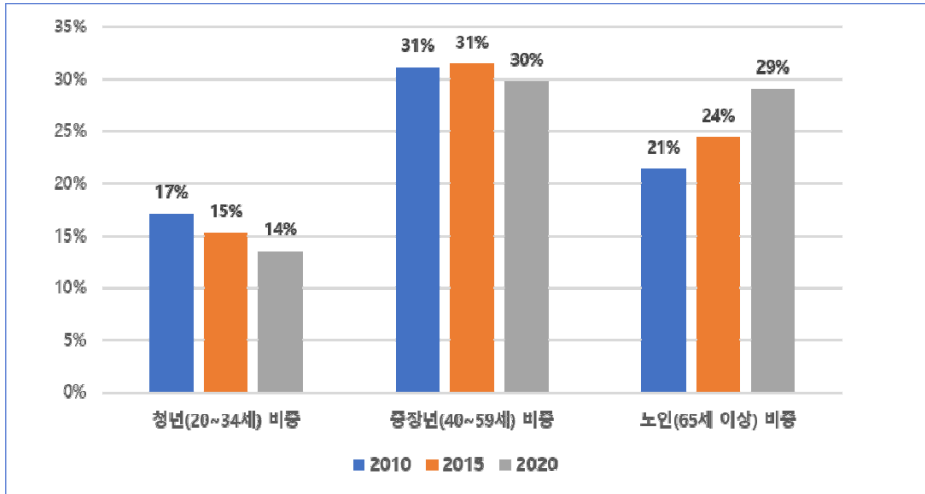
출처: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청의 「국내인구이동통계」,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인구정점연도와 인구저점연도는 각각 지역 내 인구가 가장 많고 적은 시점의 연도를 의미함.

■ [인구구조 변화] 2010~2020년 기간 동안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청년(만 20~34세) 비중은 17.0%(2010년) → 13.3%(2020년)로 줄어든 반면, 노인(만 65세 이상) 비중은 21.3%(2010년) → 28.5%(2020년)로 증가

- 2020년 기준 전국 지자체 중 청년 비중이 높은 지자체는 대부분 비인구감소지역이면서 서울에 집중된 모습을 보였으며, 노인 비중이 높은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이면서 경북, 전남군 지역에 집중 분포됨
 - 청년 비중이 높은 지자체는 서울 관악구(31.5%), 경남 고성군(30.4%), 서울 광진구(26.3%)·동작구(25.0%)·마포구(24.9%) 순이며, 노인 비중이 높은 지자체는 경북 의성군(40.8%), 전남 고흥군(40.6%), 경북 군위군(39.9%), 경남 합천군(39.0%), 전남 보성군(38.0%) 순임
- 2020년 기준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전국과 비인구감소지역 대비 청년 비중은 적고 노인 비중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임
 - 2020년 기준 전국과 비인구감소지역의 청년 비중은 각각 19.1%, 19.5%이며, 노인 비중은 각각 15.7%, 14.2%임
 - 인구감소지역에 속한 경북 의성군과 전남 고흥군은 2020년 청년 비중은 9.3%, 노인 비중은 40.8%에 육박
- 2010~2020년 기간 동안 전국 및 비인구감소지역과 비교했을 때 인구감소지역의 청년 비중은 더 큰 폭으로 감소하고, 노인 비중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인구감소지역-비인구감소지역 간 인구구조 양극화 심화 우려
 - 전국의 경우, 청년 비중은 21.4%(2010년) → 19.1%(2020년)로 2.3%p 감소, 노인 비중은 10.6%(2010년) → 15.7%(2020년)로 5.1%p 증가
 - 비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청년 비중은 21.8%(2010년) → 19.5%(2020년)로 2.3%p 감소, 노인 비중은 9.2%(2010년) → 14.2%(2020년)로 5%p 증가
 - 인구감소지역 중 청년 비중 증감률(2010~2020년)의 상위 5개 지자체는 경남 고성군(0.7%p), 강원 양구군(-0.1%p), 경기 연천군(-0.5%p), 강원 철원군(-0.8%p), 인천 용진군(-1.0%p) 순
 - 인구감소지역 중 노인 비중 증감률(2010~2020년) 상위 5개 지자체는 부산 영도구(12.2%p), 대구 서구(10.8%p), 충남 서천군(9.7%p), 강원 태백시(9.7%p), 경북 청도군(9.2%p) 순

그림 3 인구감소지역의 연령대별 인구구조 변화(2010~2020년)



출처: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청의 「국내인구이동통계」,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인구증감요인]** 2000~2019년 기간 동안 인구증감요인을 출생, 사망 등으로 인한 자연적 증감과 인구유출로 인한 사회적 증감으로 구분하여 6개 유형으로 나눠 살펴보면, 인구감소지역의 84%(75개)가 유형Ⅵ(자연적 감소, 사회적 감소)에 속함

표 2 인구증감요인에 따른 지역 유형화

구분	유형	자연적 증감	사회적 증감	비고
총인구 증가지역	Ⅰ	+	+	
	Ⅱ	+	-	자연적 증가로 인한 총인구 증가
	Ⅲ	-	+	사회적 증가로 인한 총인구 증가
총인구 감소지역	Ⅳ	+	-	사회적 감소로 인한 총인구 감소
	Ⅴ	-	+	자연적 감소로 인한 총인구 감소
	Ⅵ	-	-	

출처: 저자 작성.

- 인구가 증가한 지역 중 유형Ⅰ(자연적 증가, 사회적 증가)과 유형Ⅱ(자연적 증가, 사회적 감소)에 속한 지자체는 없음
- 인구가 증가한 지역 중 유형Ⅲ으로 분류된 3개의 지자체(경기 가평군, 인천 용진군·강화군)는 모두 수도권에 소재하며, 이들 지역은 자연적으로는 인구가 감소하나 인구유입으로 인해 총인구가 증가함
- 인구가 감소한 지역 중 유형Ⅳ(자연적 증가, 사회적 감소)에 속한 지자체는 9곳이며, 유형Ⅴ(자연적 감소, 사회적 증가)에 속한 지자체는 2곳임

- 유형 IV에 해당하는 지역은 강원 양구군·화천군·태백시·철원군, 전남 영암군·화순군, 충북 제천시, 대구 남구·서구
- 유형 V는 강원 횡성군, 경남 함안군
- 인구유입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총인구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함
 - 인구감소지역 89개 중 인구가 사회적으로 증가한 지자체(유입)·유출)는 총 5곳인데, 그 중 수도권 소재 지자체 3곳은 자연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구유입이 총인구 증가(유형 III)로 이어지나 비수도권 소재 지자체 2곳은 유입인구 수보다 출생아 수 감소, 노인인구 사망 등으로 인한 인구의 자연적 감소 폭이 더 큰 탓에 총인구가 감소(유형 V)
- 2000~2019년 기간을 5년 단위로 구분해서 살펴보았을 때 유형 VI(자연적 감소, 사회적 감소)가 20년간 지속된 지자체는 25개에 달함

표 3 인구증감요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유형화(2000~2019년)

구분	유형	자연적 증감	사회적 증감	개수	행정체제별			인구규모별(2019년 기준)			
					시	군	구	3만 미만	3만 이상 5만 미만	5만 이상 10만 미만	10만 이상 15만 미만
총인구 증가지역	I	+	+	0	-	-	-	-	-	-	-
	II	+	-	0	-	-	-	-	-	-	-
	III	-	+	3	-	3	-	1	-	2	-
총인구 감소지역	IV	+	-	9	2	5	2	2	2	2	3
	V	-	+	2	-	2	-	-	1	1	-
	VI	-	-	75	13	59	3	15	27	22	11
계	89개				15	69	5	18	30	27	14

출처: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청의 「국내인구이동통계」,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인구유출 현황]** 2010~2020년 기간 동안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인구유출이 관찰되며, 동기간 청년층(만 20~34세)의 순유출 및 중장년층(만 40~59세)의 순유입이 뚜렷하게 관찰됨
 - 최근 10여 년간 인구감소지역 거주 청년들은 지속적인 순유출, 중장년층들은 지속적인 순유입을 보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청년층 유출이 고착화된 문제라는 점을 시사할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에 있어 청년층의 유출이 핵심 고리임을 보임

표 4 연령별 순이동자 수 및 순이동률(2010~2020년)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순이동자 수(만 명)											
전체연령	-3.6	-1.3	-2.1	-1.3	-1.6	-1.4	-2.6	-2.5	-4.0	-4.0	-3.8
청년(20~34세)	-3.8	-3.2	-3.3	-3.0	-3.0	-2.8	-3.3	-3.2	-3.7	-3.7	-4.3
중장년(40~59세)	1.2	1.8	1.5	1.9	1.7	1.5	1.5	1.3	0.9	0.8	0.9
노인(65세 이상)	-0.2	-0.1	0.0	0.0	0.1	-0.0	-0.2	-0.0	-0.2	-0.2	0.2
순이동률(%)											
전체연령	-0.6	-0.2	-0.4	-0.2	-0.3	-0.3	-0.5	-0.5	-0.8	-0.8	-0.8
청년(20~34세)	-4.0	-3.5	-3.8	-3.5	-3.1	-3.4	-4.1	-4.2	-5.1	-5.2	-6.3
중장년(40~59세)	0.7	1.1	0.9	1.1	1.0	0.9	0.9	0.8	0.6	0.5	0.6
노인(65세 이상)	-0.2	-0.1	0.0	0.0	0.1	0.0	-0.1	0.0	-0.2	-0.2	0.1

출처: 통계청의 「국내인구이동통계」(2010~2020) 재구성.

- **[최근 5년간 유입지역 분포]** 최근 5년간 인구감소지역 유출인구의 유입 상위지역을 살펴보면, 시도 수준에서는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으로의 유입 양상이 관찰됨(전출지를 인구감소지역, 전입지를 229개 시·군·구로 설정)
 - 수도권, 광역시(인천 제외, 세종 포함), 도(경기 제외, 제주 포함) 면적이 국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2%, 4%, 84%인데 반해 유입인구 비중은 수도권이 29%, 광역시가 31%, 도는 40%의 값을 보여 수도권, 지방 대도시와 나머지 지역 간 인구 불균형 현상 심화 우려
 - 시·도 수준에서는 경기-서울-대구 순으로 인구가 많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기와 서울의 경우 89개 인구감소지역으로부터 인구가 고르게 유입되는 양상을 보임
 -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대체로 인근 지방 광역시와 해당 시도 내 타 시·군으로부터 인구가 유입되는 양상이 보임

- (대구) 대구 내 타 자치구, 인근 경북 시·군 및 경남 일부 시·군으로부터 인구가 유입된 결과이며, (경북) 대구와 경북 내 타 시·군, (경남) 부산과 대구, 그리고 경남 내 타 시·군, (부산) 부산 내 타 시·군과 경남, 대구로부터 인구가 유입된 결과임

표 5 최근 5년간(2016~2020) 인구유입 지역(시·도)

시·도	순유입인구(명)
경기도	233,577 (14.0%)
서울특별시	181,400 (10.9%)
대구광역시	172,259 (10.3%)
경상북도	135,492 (8.1%)
경상남도	121,581 (7.3%)
부산광역시	120,458 (7.2%)
광주광역시	103,056 (6.2%)
전라북도	101,211 (6.1%)
강원도	93,075 (5.6%)
전라남도	93,047 (5.6%)
충청남도	80,535 (4.8%)
대전광역시	71,427 (4.3%)
충청북도	57,135 (3.4%)
인천광역시	54,044 (3.2%)
울산광역시	20,384 (1.2%)
세종특별자치시	18,757 (1.1%)
제주특별자치도	11,367 (0.7%)
계	1,668,805 (100%)

주: 동일 시·군·구 내 인구가동 제외.

출처: 통계청의 「국내인구가동통계」(2010~2020) 재구성.

- 인구유입 지역을 시 지역과 군 지역으로 구분해서 보면, 인구유입 상위지역은 대체로 수도권, 광역시와 도의 시 지역인 반면 인구유입 하위지역은 대체로 도의 군 지역인 것으로 나타남
 - 시 지역으로의 유입인구 비중은 41.3%, 군 지역으로의 유입인구 비중은 10.7%로 나타나 인구유입이 적은 군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

표 6 최근 5년간(2016~2020) 인구유입 지역(시부 및 군부)

시·도	순유입인구(명)
경기도 시부	227,557 (13.6%)
서울특별시	181,400 (10.9%)
대구광역시	172,259 (10.3%)
부산광역시	120,458 (7.2%)
광주광역시	103,056 (6.2%)
경상남도 시부	101,290 (6.1%)
경상북도 시부	96,674 (5.8%)
강원도 시부	71,907 (4.3%)
대전광역시	71,427 (4.3%)
충청남도 시부	59,951 (3.6%)
전라남도 시부	55,111 (3.3%)
인천광역시	54,044 (3.2%)
충청북도 시부	40,693 (2.4%)
경상북도 군부	38,818 (2.3%)
전라남도 군부	37,936 (2.3%)
전라북도 시부	36,642 (2.2%)
강원도 군부	21,168 (1.3%)
충청남도 군부	20,584 (1.2%)
울산광역시	20,384 (1.2%)
경상남도 군부	20,291 (1.2%)
세종특별자치시	18,757 (1.1%)
전라북도 군부	17,390 (1.0%)
충청북도 군부	16,442 (1.0%)
제주특별자치도	11,367 (0.7%)
경기도 군부	6,020 (0.4%)
계	1,668,805 (100%)

주1: 동일 시·군·구 내 인구이동 제외.

주2: 서울특별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도 지역은 시와 군 지역으로 구분.

출처: 통계청의 「국내인구이동통계」(2010~2020) 재구성.

■ 시·군·구 수준에서의 유입 상위지역은 주로 지방 광역시 소재 시·군·구 또는 지방 대도시(주요 산업도시와 인근 위성도시)로 나타남

- 시·군·구 수준(229개)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전출인구가 대구 달서구-전북 전주시-경남 창원시 등의 순으로 많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남
- 유입 상위지역을 대상으로 유입인구의 전출지를 살펴보면, 대체로 광역시 내 시·군·구의 경우 동일 광역시 내 타 시·군·구와 인접한 시도 내 타 시·군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양상
 - 유입 상위지역인 대구 달서구는 대구 서구·남구(58%)와 경북 시·군(30%)에서 주로 인구가 유입됐으며, 광주 북구는 인근 전남 시·군(81%)에서, 대구 북구는 대구 달서구와 유사하게 대구 서구·남구(33%)와 경북 시·군(37%)에서 주로 인구가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
- 지방 대도시의 경우 동일 시·도 내 타 시·군에서 주로 인구가 유입되는 양상을 보임
 - 전북 전주시는 전북 타 시·군(82%), 경남 창원시는 경남 타 시·군(70%)에서 다수의 인구가 유입된 것으로 확인됨

표 7 최근 5년간(2016-2020) 인구유입 상위·하위지역(시·군·구)

상위 10개 시·군·구	순유입인구(명)
대구 달서구	48,178
전북 전주시	47,179
경남 창원시	37,390
광주 북구	32,614
대구 북구	30,661
광주 광산구	26,935
충북 청주시	26,013
대전 서구	24,173
대구 수성구	23,054
대구 달성군	22,149

주: 동일 시·군·구 내 인구이동 제외.

출처: 통계청의 「국내인구이동통계」(2010-2020) 재구성.

■ **[최근 5년간 청년과 중장년층의 유입지역 분포]** 최근 5년간 인구감소지역 유출 청년층(만 20~34세)의 유입 상위지역은 시·도 수준에서는 경기-서울-대구 순, 중장년층(만 40~59세)은 경기-대구-경북 순으로 나타나 청년층의 수도권으로의 유출 양상이 관찰됨

-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공통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부터 경기로의 유출이 가장 많고, 제주의 유출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청년층의 경우 수도권으로의 유출인구 비중이 32.7%로 나타나 청년 유출인구 3명 중 1명 꼴로 인구감소지역에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중장년층은 수도권으로의 유출인구 비중이 22.7%에 그침

표 8 최근 5년간(2016~2020년) 연령대별 인구유입 지역(시·도)

청년층(20~34세)		중장년층(40~59세)	
시·도	순유입인구(명)	시·도	순유입인구(명)
경기도	97,951 (14.8%)	경기도	61,084 (12.6%)
서울특별시	97,544 (14.7%)	대구광역시	55,317 (11.4%)
대구광역시	60,986 (9.2%)	경상북도	44,377 (9.1%)
경상북도	48,413 (7.3%)	경상남도	39,862 (8.2%)
부산광역시	45,908 (7.0%)	부산광역시	34,866 (7.2%)
경상남도	41,795 (6.3%)	서울특별시	34,235 (7.1%)
광주광역시	40,558 (6.1%)	전라남도	33,253 (6.8%)
전라북도	34,266 (5.2%)	전라북도	33,169 (6.8%)
대전광역시	33,818 (5.1%)	강원도	30,283 (6.2%)
강원도	33,522 (5.1%)	광주광역시	29,531 (6.1%)
충청남도	32,307 (4.9%)	충청남도	24,147 (5.0%)
전라남도	29,467 (4.5%)	충청북도	17,510 (3.6%)
충청북도	22,583 (3.4%)	대전광역시	17,443 (3.6%)
인천광역시	21,830 (3.3%)	인천광역시	14,533 (3.0%)
울산광역시	8,037 (1.2%)	세종특별자치시	5,892 (1.2%)
세종특별자치시	7,175 (1.1%)	울산광역시	5,761 (1.2%)
제주특별자치도	3,806 (0.6%)	제주특별자치도	4,268 (0.9%)
계	659,966 (100%)	계	485,531 (100%)

주: 동일 시·군·구 내 인구가동 제외, 세대주로 한정.
출처: 통계청의 「국내인구가동통계」(2010~2020) 재구성.

■ 인구유입 지역을 시 지역과 군 지역으로 구분해서 보면, 유입 상위지역은 청년층(만 20~34세)의 경우 서울, 경기도 나타나 수도권으로의 뚜렷한 유입 양상을 보임

- 청년층은 유출인구의 32.7%가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한편 중장년층은 유출인구의 22.5%가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나 중장년층 대비 청년층의 수도권으로의 집중 양상이 관찰됨

표 9 최근 5년간(2016~2020) 연령대별 유입 상위 5개 지역(시부 및 군부)

청년층(20~34세)		중장년층(40~59세)	
구분	순유입인구(명)	구분	순유입인구(명)
서울특별시	97,544 (14.8%)	경기도 시부	58,397 (12.1%)
경기도 시부	93,806 (14.3%)	대구광역시	55,317 (11.4%)
대구광역시	60,986 (9.3%)	부산광역시	34,866 (7.2%)
부산광역시	45,908 (7.0%)	서울특별시	34,235 (7.1%)
광주광역시	40,558 (6.2%)	경상남도 시부	31,876 (6.6%)

주: 동일 시·군·구 내 인구가동 제외, 세종주도 한정.
 출처: 통계청의 「국내인구가동통계」(2010~2020) 재구성.

■ 권역별로는 청년층(만 20~34세)은 수도권, 중장년층(만 40~59세)은 도 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이 두드러지며,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공통적으로 인구감소지역에서 수도권, 광역시로 대표되는 대도시로 인구가 다수 이동하는 양상을 보임

- 청년층은 수도권으로의 유출인구 비중이 32.7%, 중장년층은 도 지역으로의 유출인구 비중이 4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에 따라 권역별로 서로 다른 유입 양상을 보임
- 다만 수도권과 광역시로의 유출비중은 청년이 64.6%, 중장년층이 53.2%로 나타나 최근 5년 동안 두 연령대 모두에서 인구감소지역에서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이 관찰됨

표 10 최근 5년간(2016~2020) 연령대별 유입인구 분포(권역)

유입지역	순유입인구 비중(%)	
	청년층(20~34세)	중장년층(40~59세)
수도권	32.7	22.5
광역시(인천 제외, 세종 포함)	29.9	30.7
도(경기 제외, 제주 포함)	37.4	46.8
시부	29.2	32.7
군부	7.6	13.3
계	100	100

주: 동일 시·군·구 내 인구가동 제외, 세종주도 한정.
 출처: 통계청의 「국내인구가동통계」(2010~2020) 재구성.

03 인구감소지역 유출인구 특성 분석

1) 개요

- 그간 지역 현장에서 실제로 인구감소를 야기하는 인구유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단 및 대응 미흡
 - 우리나라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래 지역의 사회적 인구이동은 국가 전체적으로 제로점으로 인식하여 저출산 극복,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책에 주된 관심을 기울여 왔음(박진경·김도형 2020; 국토연구원 2021)
- 최근의 연구들은 지역의 인구감소와 지역 간 인구 양극화를 초래하는 주된 요인으로 인구이동을 꼽음(이상림 외 2018; 김준영 2019)
 - 우리나라 전 국토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낮은 출산율과 높은 고령화를 인 것은 분명하나 지역 수준의 인구규모와 인구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은 인구이동이라 볼 수 있음
- 타지역 대비 인구감소 정도가 심각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유출은 지역의 생산·소비의 축소 및 지역 활력 저하와 지역경제 기반을 약화해 지역 소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서 인구감소지역의 유출인구 특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임
 - 특히 지역의 노동인구 유출은 지역 간 인구규모 격차로 인한 양적 불균형 외에 질적 불균형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유출인구 특성 분석을 위해 직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
 - 지방에는 일자리가 없어 떠난다는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듯 2020년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순유입 사유와 비수도권 시·도 지역의 유출 1순위 응답 사유는 ‘직업’으로 나타남
 - 유사 연구로는 국내 지방 중소도시에서 유출되는 생산가능인구의 유출 현황과 이들의 직종 특성을 분석한 최예술(2021)의 연구가 있으나, 해당 연구는 5년 단위로 집계되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원시자료를 활용한 탓에 부득이 이동 전 시점과 현재 시점의 교육 수준, 직종 등의 개인의 특성이 동일함을 가정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는 한계를 가짐

- 이 장에서는 「한국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하여 2010~2020년 기간 동안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이동 요인을 분석하고, 연령, 교육 수준, 직종 등 유출인구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함

2)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 분석자료로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2010년(제13차)부터 2020년(제23차)까지 매년 조사된 「한국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함

-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전국 규모의 패널조사로서 연령, 교육 수준 등 개인의 일반적인 특성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노동시장 이동, 소득활동 등에 관하여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임
 - 전국 규모의 비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내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구성원(5천 가구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1998년 이후 매년 조사 실시
- 「한국노동패널자료」는 유출인구의 특성을 다면적으로 분석하는 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로 판단됨

■ 자료 가공과정 및 분석대상

- 2010~2020년 기간 동안 수집된 총 2만 9,302명의 가구원 자료 중 같은 기간 관측치가 1개인 표본 2,305명을 제거하고 남은 표본(2만 6,997명)을 대상으로 89개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표본으로 한정(2만 1,298명)하고, 이들 표본을 다시 '이동(336명)'과 '비이동(2만 962명)'으로 구분
 - '이동'은 인구감소지역에서 그 외 비인구감소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비이동'은 인구감소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계속 머무는 경우로 간주함. 여기서 지역 단위는 시·군·구임
 - 「한국노동패널자료」는 각 시점에서의 거주지 정보를 시·군·구 수준에서 제공하고 있어 시점 간 비교를 통해 개인의 이동 여부를 식별할 수 있음
 - 유출직종 분석에서는 「한국노동패널자료」 내 연도별로 부여된 가중치를 적용하여 대표성 있는 통계분석 결과를 얻고자 함
- 이 연구에서 활용한 개인 표본은 인구감소지역 유출인구의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의 특성 및 가용 가능한 표본 수 확보 등을 고려하여 국내 89개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전 연령대의 인구로 한정함
- 유출인구 특성 분석 시점은 유출인구의 이동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함

- 유출인구 직종 특성 분석을 위해 「한국노동패널자료」 내 소분류(3 digit, 181개(군인 제외)) 수준에서 코딩된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코드를 대분류(1 digit, 9개), 중분류(2 digit, 67개(군인 제외)) 수준으로 매칭함
 - 매칭된 한국표준직업분류 중분류 코드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19년에 발간한 통합본 제5판 「한국직업사전」(김중진·권운섭)의 직업별 정보와 연계하여 유출인구의 직종 특성을 분석하는 데 활용함
 - 제5판 「한국직업사전」은 2012~2018년간 세분류 수준에서 직종별 직무개요, 수행직무, 정규교육연수, 숙련기간, 직무기능, 직업강도 등의 정보를 담고 있어(김중진·권운섭 2019), 유출인구의 직종 특성을 분석하는 자료로서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3)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이동 요인 및 유출인구 특성 분석

■ 인구감소지역 유출인구 특성

- **(연령)** 비이동자의 평균연령은 46세, 이동자의 평균연령은 36세로 이동자의 평균연령이 약 10세 정도 낮았으며, 이동한 사람들의 다수(67.6%)가 10~30대의 젊은 층인 것으로 나타나 젊은 층의 이동 양상이 뚜렷하게 관찰됨
 - 특히 타 연령대 대비 20~30대 청년층의 비인구감소지역으로의 유출이 심각한 상황
- **(성별, 혼인상태)** 이동자의 경우 비이동자 대비 남성과 미혼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음
- **(교육수준)** 교육수준의 경우, 대졸 미만 비중이 비이동이 68.7%인데 비해 이동이 44.8%이며, 대졸 이상 비중은 비이동이 31.1%인데 비해 이동이 55.1%에 이르고 있어 비인구감소지역으로의 고학력자(대졸 이상의 학력 수준 보유)의 유출 양상이 관찰됨
- **(소득수준)** 월평균 임금은 비이동자가 약 257만 원, 이동자가 약 247만 원으로 비이동자의 월평균 임금 수준이 소폭 높음

표 11 인구감소지역 비이동자 및 이동자 특성(2010~2020년)

구분		비이동		이동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성별(남성=1, 여성=0)		0.4969	0.4999	0.6085	0.4888
혼인상태(기혼=1, 그 외=0)		0.5191	0.5000	0.3184	0.4666
연령 (해당=1)	연령(세)	46.38	18.1321	36.87	15.8639
	10대 미만 및 10대	0.0874	0.2825	0.0641	0.2454
	20~30대	0.2675	0.4426	0.6129	0.4878
	40~50대	0.4048	0.4912	0.2085	0.4069
	65세 이상	0.1659	0.3720	0.0788	0.2699
교육수준 (해당=1)	고졸 미만	0.3018	0.4590	0.1674	0.3739
	고졸 이상 대졸 미만	0.3866	0.4869	0.2813	0.4503
	대졸 이상 대학원 졸 미만	0.2869	0.4523	0.5075	0.5007
	대학원 졸 이상	0.0246	0.1551	0.0436	0.2046
월평균 임금(만 원)		257.49	192.2876	247.81	146.3446

■ 인구이동 요인 분석을 위해 이항 로지스틱 모형을 활용한 회귀분석 수행

-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이동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실증분석모형은 다음의 식과 같음

$$Y_i = \beta_0 + \sum_{k=1}^j \beta_{ki} X_{ki} + \epsilon$$

- 종속변수는 2010~2020년 기간 동안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i 의 비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동 여부인 Y_i 이며 이동한 경우는 1, 비이동인 경우는 0으로 표현됨
- 설명변수인 X_{ki} 는 이동 전 시점의 개인 i 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월평균임금 등의 개인 수준의 k 번째($k = 1, \dots, j$) 변수를 의미하며, β_0 는 개인의 평균이동확률, β_{ki} 는 X_{ki} 에 대한 회귀계수, ϵ 는 오차항을 의미함
- 이항변수(binomial variable)인 종속변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계함수로 로짓함수(logit link function)를 사용함

■ 인구이동 요인 분석 결과

-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표 11) 참조에 따르면, 2010~2020년 기간 동안 인구감소지역에서 비인구감소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연령과 교육 수준 일부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값이 나타남
 -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값에 한정하여 해석함
 - 본 장에서 이동확률은 인구감소지역에서 비인구감소지역으로 이동할 확률을 의미

- 연령의 경우 10대 미만 및 10대를 준거집단으로 하였을 때, 20~30대의 이동확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65세 이상 인구 즉 고령인구의 이동확률은 낮게 나타남
- 교육 수준에서는 고졸 미만을 준거집단으로 하였을 때, 대학원 졸업 이상의 고학력 집단의 이동확률이 정(+)의 값을 보임
-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지난 10년간 인구감소지역에서 비인구감소지역으로의 20~30대 청년들의 유출과 고학력자의 유출이 통계적으로 실증됨
 - 인구이동 관련 문헌들은 연령은 개인의 이동을 결정하는 유의미한 요인으로서 일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이동에 의한 생애기대소득이 크기 때문에 이들의 이동확률이 더 높음을 실증함(Rogers et al. 1978; Pissarides and Wadsworth 1989; Antolin and Bover 1997)
 - 특히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와 농촌에 거주하는 고학력의 젊은 층일수록 더 나은 교육환경 및 생활환경과 고용기회를 얻기 위해 대도시로의 이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Artz 2003; Gibson and McKenzie 2012), 대도시는 중소도시 및 농촌으로부터 ‘최고(the best)’의 ‘우수한(the brightest)’ 개인들을 끌어당기는 자석으로 작용하고 있어(Costa and Kahn 2000; Ritsilä and Ovaskainen 2001) 지역 차원에서 젊고 유능한 인재를 보유하고 끌어들이 수 있는 대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

표 12 인구감소지역 인구이동 요인 분석 결과

구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성별(남성=1, 여성=0)		0.0396	0.2348
혼인상태(기혼=1, 그 외=0)		-0.4106	0.2593
연령 (해당=1)	10대 미만 및 10대	준거집단	
	20~30대	1.4082***	0.4095
	40~50대	-0.2957	0.3965
	65세 이상	-1.8831***	0.6211
교육 수준 (해당=1)	고졸 미만	준거집단	
	고졸 이상 대졸 미만	0.1066	0.3457
	대졸 이상 대학원 졸 미만	0.4450	0.3597
	대학원 졸 이상	1.9476***	0.6626
ln(월평균임금(만원))		0.0231	0.1870
상수항		-0.9178	0.9049
LR chi2		138.79***	
Pseudo R ²		0.1961	

주: * p-value<0.1, ** p-value<0.05, *** p-value<0.01.

출처: 저자 작성.

■ 인구감소지역 유출인구 직종 특성

- **(개요)**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1 digit)와 중분류(2 digit) 수준에서 인구감소지역에서 非인구감소지역으로 유출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직종과 낮은 직종을 분류하고 이들 직종의 특성을 살펴봄
 - 직종별 유출비율은 해당 직종의 이동빈도(명)를 인구감소지역 내 해당 직종 표본 수(명)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표시한 값으로 계산
-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수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 사무 종사자(3)의 유출이 두드러진 반면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6)와 단순 노무 종사자(9)의 유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표준직업분류 중분류 수준)** 유출비율이 높은, 즉, 인구감소지역에 남아있지 않고 非인구감소지역으로 유출되는 직종들의 다수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에 속하며 고학력·고숙련을 요구하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직종임
 - 2020 한국직업사전에 따르면, 이들 직종(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 제외)은 대체로 대학교 졸업 이상의 높은 정규 교육 수준을 요구하면서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며, 관련 분야 지식을 응용하여 자료를 조정·분석하거나 사람(people)을 상대로 자문하는 인지적(cognitive)·상호적(interactive) 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을 가진
 - 또한 숙련기간이 대체로 4년 이상으로 길고, 작업 강도는 비교적 높지 않으며 작업공간은 주로 실내임
 - 유출비율 상위 5개 직종: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23),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28),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82), 정보 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22),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41) 순임
- **(한국표준직업분류 중분류 수준)** 반면 유출비율이 낮아 인구감소지역에 남아있는 직종들은 대체로 단순 노무 종사자(9)로서 저학력·저숙련 및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을 요하는 직종이 주를 이룸
 - 2020 한국직업사전에 따르면, 유출비율이 낮은 직종들은 대체로 고졸 이하의 정규 교육 수준과 숙련기간은 6개월 초과~1년 이하를 요구하며 사물(thing)을 대상으로 정밀한 작업보다는 투입·인출 등 단순작업을 수행하는 직무기능을 수행하는 저숙련 직종의 특성을 보임
 - 주로 실외에서 근무하며 작업강도는 육체적 숙련(physical skills)을 통한 ‘힘든 작업’이 주를 이룸

- 유출비율 하위 5개 직종 :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99),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94), 농·축산 숙련직(61),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93),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89) 순임
- 직종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지난 10년간 인구감소지역에서의 고학력·고숙련·고부가가치 창출 직종의 유출이 두드러진 반면, 저학력·저숙련·고강도를 요구하는 직종의 유출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임
-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흔히 선호 직업으로 일컬어지는 고학력·고숙련·고임금 직종에 대한 인구감소지역·비인구감소지역 간 양극화 심화 또한 우려되는 상황

표 13 인구감소지역 유출인구 직종 분석 결과: 대분류 수준

한국표준직업분류(대분류)	유출비율(%)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	14.5
사무 종사자(3)	8.5
서비스 종사자(4)	4.1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8)	3.6
관리자(1)	3.0
판매 종사자(5)	2.9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7)	2.4
단순 노무 종사자(9)	2.2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6)	0.4

주: 유출비율(%)=(해당 직종의 이동빈도(명)/인구감소지역 내 해당 직종 표본 수(명))*100.
출처: 저자 작성.

표 14 인구감소지역 유출인구 상위 및 하위 직종

유출비율 상위 5개 직종		
순위	한국표준직업분류(중분류)	유출비율(%)
1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23)	45.0
2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28)	45.0
3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82)	43.0
4	정보 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22)	40.0
5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41)	26.0
유출비율 하위 5개 직종		
순위	한국표준직업분류(중분류)	유출비율(%)
1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99)	0.0
2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94)	0.0
3	농·축산 숙련직(61)	0.0
4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93)	1.0
5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89)	1.0

주: 유출비율(%)=(해당 직종의 이동빈도(명)/인구감소지역 내 해당 직종 표본 수(명))*100
출처: 저자 작성.

04 종합 및 시사점

- 2021년 10월 정부는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했고, 향후 2년 동안은 인구감소 실태 등을 분석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보완할 계획을 발표했으므로 현시점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변화 실태 분석의 필요성이 커짐
-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 변화 실태)** 지난 10년간 인구감소지역-비인구감소지역 간 인구증감률 및 청년·고령인구 비중 격차가 상당한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시 향후 인구감소지역-비인구감소지역 간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의 격차 심화 우려
 - 다만 인구감소지역 내에서도 인구증감률 격차 또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기초 지자체들은 인구증감률에 있어 동질적인 특성을 보이진 않음
 - 지난 10년간 인구감소지역 다수의 인구증감률은 -20% 내외인 반면, 수도권 소재 일부 시·군과 수도권 인접 일부 시·군의 인구증감률은 인구감소지역임에도 오히려 양(+)의 값을 보임
 - 청년 비중은 비인구감소지역인 서울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노인 비중은 인구감소지역에서 높게 나타났음. 특히 노인 비중이 높은 지역들은 인구감소지역 중에서도 경북과 전남 군 지역에 집중 분포
- **(인구이동 실태)**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낮은 출산율, 높은 고령화율이 인구감소를 야기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역 간 인구 양극화를 초래하는 주된 요인은 청년층 유출임
 - 2000~2019년 기간 동안 인구감소지역 중 인구가 자연적으로도 감소하고, 사회적으로도 감소한 지역은 75곳(84%)에 달하며, 인구의 자연적 감소 및 사회적 감소가 20년간(5년 단위 분석) 지속된 지자체는 23개에 달함
 - 2000~2019년 기간 동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 중 인구가 증가한 지자체는 3곳에 불과한데 이들 지역은 모두 수도권에 소재하며, 이들은 자연적으로는 인구가 감소하나 타지역에서 인구가 다수 유입되어 총인구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지난 10년간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청년층의 순유출과 중장년층의 순유입이 관찰되었는데, 최근 5년간 인구감소지역에서 유출된 청년 3명 중 1명은 수도권으로 향함

- 지역경제의 증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주요 유출지역(시·도)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인구감소지역에서 군 지역이 아닌 수도권, 광역시로 대표되는 대도시로 인구가 다수 이동하는 양상을 보임

■ **(인구이동 요인 및 유출인구 특성)** 지난 10년간 인구감소지역에서 비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동에 있어 20~30대의 젊은 층과 대학원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의 이동확률이 높게 나타남

- 앞선 인구이동 분석 내용을 뒷받침하듯이 연령에서는 10대 미만 및 10대를 준거집단으로 하였을 때, 20~30대의 이동확률은 정(+)의 값을 보인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의 이동확률은 부(-)의 값을 보임
- 교육 수준에서는 고졸미만을 준거집단으로 하였을 때 대학원 졸업 이상 집단만이 이동확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값을 보임

■ **(유출인구 직종 특성)** 지난 10년간 유출비율이 높은 직종은 대체로 고학력·고숙련·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직종인 반면, 저학력·저숙련·고강도의 육체적 노동을 요구하는 직종의 유출은 매우 적어 인구감소지역-비인구감소지역 간 직종 양극화 심화 또한 우려

- 2010~2020년 기간 동안 인구감소지역에서 비인구감소지역으로 유출된 인구의 직종은 대체로 선호 직종으로 일컬어지는 전문가 등의 고학력·고숙련·고임금 직종인 반면, 유출비율이 낮은 직종의 다수는 상대적으로 저학력·저숙련·고강도의 육체적 노동을 요구하는 단순 노무 종사자(9)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선호 직종의 비인구감소지역 집중은 더 나은 ‘직업’을 찾아 인구감소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의 유출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인구감소지역 내 인구증감률 등 인구감소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관찰됨에 따라 보다 면밀한 인구변화 실태 분석을 통한 지역 간 차등적인 행정·재정적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행정안전부는 '22년 상반기에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기금 투자계획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금을 배분할 계획임.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광역지원계정(25%)은 재정과 인구 관련 여건을 고려하여 정액 배분될 예정이며, 기초지원계정(75%)은 인구감소지역 우선 배분 및 제출한 투자계획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될 예정임(행정안전부 2022.2.8. 고시)

■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투자계획 수립 시 인구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 기초해 지역 고유의 자산·자원을 발굴하여 지역다움을 유지하고, 인구 유입·정책 전략과 함께 지역의 교육·일자리 확충 및 고령자의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국토연구원. 2021. 지방소멸 대응 대책 수립 연구. 세종: 행정안전부.
- 김준영. 2019. 비수도권 청년인구의 유출과 수도권 집중: 최근의 변화. 고용동향브리프 봄호. 음성: 한국고용정보원.
- 김중진·권윤섭. 2019. 2020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제5판. 음성: 한국고용정보원.
- 박진경·김도형. 2020. 인구감소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 추진방안. 원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상림·이지혜·Bernhard Koppen·임소정·성백선. 2018. 지역 인구공동화 전망과 정책적 함의,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예슬. 2021. 지방 중소도시의 유출인구 직종 특성 분석. 국토연구 108호: 3-18.
- 파이낸셜뉴스. 2021. 행안부, 인구감소 89곳 지정. 1조원 지방소멸기금 지원. 10월 18일.
<https://www.fnnews.com/news/202110180950184208> (2022년 5월 2일 검색).
- 통계청. 2021. 사상 첫 인구감소, 세대수는 사상 최대. 1월 4일, 보도자료.
 _____. 국내인구이동통계. <https://mdis.kostat.go.kr/index.do> (2022년 5월 10일 검색).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https://www.kli.re.kr/klips/index.do> (2022년 5월 10일 검색).
- 행정안전부. 2021.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다. 10월 18일, 보도자료.
 _____. 2022. 연1조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자한다. 2월 8일, 보도자료.
 _____. 주민등록인구현황. <https://jumin.mois.go.kr/> (2022년 5월 10일 검색).
- Antolin, P. and Bover, O. 1997. Regional migration in Spain: the effect of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of unemployment, wage and house price differentials using pooled cross-sections.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59, no.2: 215-235.
- Artz, G. 2003. Rural area brain drain: Is it a reality? *Choices* 18, no.4: 11-15.
- Costa, D. L. and Kahn, M. E. 2000. Power couples: changes in the locational choice of the college educated, 1940-1990.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5, no.4: 1287-1315.
- Gibson, J. and McKenzie, D. 2012.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brain drain' of the best and brightest: Microeconomic evidence from five countries. *The Economic Journal* 122, no.560: 339-375.
- Pissarides, C. A. and Wadsworth, J. 1989. Unemployment and the inter-regional mobility of labour. *The Economic Journal* 99, no.397: 739-755.
- Ritsilä, J. and Ovaskainen, M. 2001. Migration and regional centralization of human capital. *Applied Economics* 33, no.3: 317-325.
- Rogers A. R., Raquillet R, and Castro L. 1978. Model migration schedules and their applications. *Environment and Planning A* 10, no.5: 475-502.

국토연구원 Working Paper는 다양한 국토 현안에 대하여 시의성 있고 활용도 높은 대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실험정신을 가지고 작성한 짧은 연구물입니다. 투고된 원고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발간되며, 외부 연구자의 투고도 가능합니다. 공유하고 싶은 새로운 이론이나 연구방법론, 국토 현안이나 정책에 대한 찬반 논의, 국내외 사례 연구나 비교연구, 창의적 제안 등 국토분야 이론과 정책에 도움이 될 어떠한 연구도 환영합니다.

투고를 원하시는 분은 국토연구원 연구기획·평가팀(044-960-0438, bbmoon@krihs.re.kr)으로 연락주십시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WP 22-06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변화 실태와 유출인구 특성 분석

연구진 최예술
발행일 2022년 5월 25일
발행인 강현수
발행처 국토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rihs.re.kr>

© 2022,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한국출판인협회에서 제공한 KoPub 서체와 대한인쇄문화협회가 제공한 바른바탕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